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I . 총 평	1
II .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5인)	2
③ 패널토론(발제자, 토론자)	5
④ 마무리 말씀	7
III .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8
IV .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의 청년, 전문가, 관계 공무원들의 논의를 통하여 충남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청년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안 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청년정책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 6. 8.(월), 15:00~17:00 / 충청남도의회 112호
- 참 석 : 40명(충남의 청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현주소
- ※ 신청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현 부위원장

I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충남의 청년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충남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청년 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충남의 청년, 충청남도, 도의회가 청년정책 관련 중간지원조직(예:청년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흐름 및 타 시도의 사례를 공유하여 충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충남의 청년정책을 발굴하는데 조례의 개정과 함께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함.

○ 앞으로,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 및 중간지원 조직 설립 등 충청남도 청년 정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권지웅 (前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 한국에서 청년정책을 처음으로 정의한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인데 2015년 1월에 제정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가 그 시초이며, 「청년 기본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제 청년문제는 단순한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 ‘기후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 ‘ 등 세대를 관통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와 모두 맞물려 있어 일자리 정책에 한정짓지 말고 다양한 시각에서 청년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청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청년주도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과 미래 반영적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편성 역량, 전달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차이를 고려하여 각 기관은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역할을 달리하여야 함.
- 이 외에도 청년정책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센터 같은 참여기구를 법제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충남의 청년정책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참여기구의 실질적 운영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2 지정토론(5인)

① 강석주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중앙정부는 청년소통정책관,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는 올 1월에 전담부서(청년정책과)를 설치하고 청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청남도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타지역 인구 유출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부족, 타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영유아 및 아동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2020년 충남 청년정책 주요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설명.
 -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충남 청년정책추진본부의 내실운영과 정책 컨트롤타워 수행기능 강화 및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 추진 예정
 - 청년의 도정참여를 위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선정 및 청년 위원 위촉률을 정비하고 참여기구인 충남청년 네트워크를 보완하여 2기 구성 예정
 - 청년의 수요에 맞춘 청년체감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멘토단 운영, 경제 취약계층인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주거안전망 구축지원, 주거, 교육, 소통공간 조성 등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예정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 (‘20년 71개사업, 386억원, 1,690명 일자리 창출) 및 지역대학과의 취업지원 체계구축 등 추진예정

②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남의 청년정책은 생애주기별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으며,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결혼 등 가족 등을 포함하는 정책범위를 가지고 있음.
- 청년정책은 청년니즈와 충남 현실을 기초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 질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이에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해 볼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 필요함.
- 현재 충남에 있는 청년이 아닌 장래에 충남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청년과 그 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충남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행정부와 소통하려면 청년네트워크와 같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③ 지민규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

- 타시도에 비해 청년정책에 대하여 충남은 늦은 편으로, ‘청년 기본 조례’가 신설되긴 했으나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네트워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활동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에 청년 참여기구가 명시되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함
- 청년에 대한 나이규정이 충남은 만 18세에서 34세로 규정되고 있는데, 서울 청년청, 대전, 대구처럼 선배 활동가 그룹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청년중간지원조직을 설립시 위탁보다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강원도, 경기도처럼 청년특보제도가 충남도에도 구성되고, 도의회 청년특별위원회라든지 정기적인 청년연구모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충남 청년 온라인 플랫폼이 제대로 구성되어 충남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길 바람.

④ 김광민 (전라남도 청년협의체 부대표)

- 전남지역은 조례에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의 1/2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곳으로 무엇보다도 청년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청년정책에 청년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기초자치단체에 먼저 청년센터가 설치되어야 함.
- 충남의 청년기본조례 개정시 청년센터가 반드시 규정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청년정책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그 많은 청년정책을 다루기에는 행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청년정책 시행전에 테스트베드를 통한 의견반영이 잘 되어 불필요한 정책시행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참여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⑤ 고현진 (청년협동조합 「그려」 이사)

-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을 느끼고, 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조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후 17,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나, 현실은 신규설립 수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등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협동조합에 대한 낮은 인식, 주식회사 중심의 경제활동과 사회적기업 위주의 제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 그리고 청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길 바람.

③ 패널토론

-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적 업무를 보시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서 피드백도 하고, 정책발굴도 해야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이 확보가 되었는지 궁금함.

[질문 : 김광민 전남 청년협의체 부대표]

- 현재 청년정책과 현원이 11명인데,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빠른 시일내에 중간지원조직이 생기길 바라고 있으며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기존의 타부서에서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제약을 받기도 하였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오늘 논의한 조례 개정 및 지원센터 설립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강석주 충청남도 청년정책과장]

- 박춘섭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동의하고, 이 모든 논의가 특정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행정부와 현격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 논의가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행정부와 시(도)민의 언어를 바꿔서 얘기해 줄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 또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의 참여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운영할 사업자를 뽑게 될텐데, 이런 내용을 근거리에서 보는 충남청년네트워크 같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참여요건을 반영하는게 필요해 보임.

[의견 : 권지웅 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 충남 청년 조례에 “충남청년네트워크” 근거 규정을 넣는 것은 6~7월중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할 것이며, 센터문제는 “청년 기본법” 시행이 되면, 행정부에서 청년네트워크 의견을 받아 9월 회기에 전부개정으로 진행을 할 것임.
- 또한 말씀해주신 청년특별보좌관제도는 우리 정책보좌관께서 잘 듣고 가셔서 결정할 것이고, 도의회 청년특별위원회 또는 청년정책연구모임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할 것임.
- 플랫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었으므로 실제 활용이 잘 되도록 많은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음.

[의견 : 안장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 ※청중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질문자가 없음>

4 마무리 말씀

-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오늘을 시작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살고싶은 충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함.

[마무리 발언 : 지민규/ 충남청년네트워크]

- 앞으로 이런 논의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구를 설치하겠음.
- 심의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함을 과장님께서도 공감 하셨을 테고,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한 절실함은 도민들이 판단할 몫이라 생각함.
-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인하도록 할 것임.

[마무리발언 : 안장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실제 충남의 청년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정책결정기구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
- 행정부와 도민(청년)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시급히 필요.
- 도지사직속 청년특별보좌관제, 청년정책연구모임 등 논의를 이어나갈 제도적 기구 필요

<결 과>

- 정책결정에 현실적인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조례에 ‘청년네트워크’ 근거·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
- 행정부와 청년(도민)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하여 조례개정과 예산반영을 제안.
- 수시로 청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하여 청년특별보좌관제, 청년정책연구모임 등 제도적 기반마련 제안.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참고 1 의정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명	제목(30건)	비고 (보도일자등)
인터넷.통신보도		28건	
1	충남일보	충남 청년정책, '청년 요구 파악' 우선한 제도 지원 뒤따라야	'20.06.08
2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3	중도일보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
4	아주경제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5	충청데일리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6	충청탐뉴스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7	C뉴스041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8	시사통신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9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10	아시아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11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12	국제뉴스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
13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
14	충청뉴스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점검	"
15	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16	MBS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17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 요청 '청년정책 현주소' 의 정토론회 개최	〃
18	백제뉴스	안장현 주도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의정토론회 관 심집중	〃
19	시사뉴스24	"청년이 정책결정 주체돼야"...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토론회	〃
20	세종방송	안장현 의원,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21	천지일보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	〃
22	아산투데이	충남 청년정책 현주소'는?	〃
23	충남신문	안장현 충남도의원, 청년정책 현주소는?	〃
24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25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26	뉴스웨이브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27	플러스코리아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28	IPN뉴스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
지면보도		2건	
29	금강일보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20.06.09 정치04면
30	투데이충남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20.06.09 종합02면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안장현 도의원 요청…청년기본법 시행 개정 모색

충남도의회는 8일 회의실에서 ‘충남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장현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될 ‘청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의 청년정책 실태와 문제점,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이 좌장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을 역임한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강석주 청년정책과장, 충남연구원 박춘섭 책임연구원, 충남청년네트워크 지민규 위원장, 전남 청년의 목소리 김광민 부대표, 청년협동조합 ‘그려’ 고현진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권 이사는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청년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여건 상 다양해진 정책메뉴를 개발하고 현실화 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일자리정책을 넘어선 청년정책의 해법마련, 정부와 광역·기

초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관계 구축 등을 청년정책 발전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충남의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의 요구 파악을 우선한 제도적 지원과 청년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입을 모으는 동시에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다른 세대 집단과 비교하면 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는 지난 15년간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 역시 지난 2016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선 청년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기구 활성화와 청년센터 설치 등 정책과 지원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석지후 기자

116 X 173 mm

금강일보

2020년 06월 09일 (화)

정치 04면

청년정책 현주소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8일 ‘충남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장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4)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될 ‘청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도의 청년정책 실태와 문제점,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안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을 역임한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 충

남도 강석주 청년정책과장, 충남연구원 박춘섭 책임연구원, 충남청년네트워크 지민규 위원장, 전남청년의목소리 김광민 부대표, 청년협동조합 ‘그려’ 고현진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권 이사는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청년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여건 상 다양해진 정책메뉴를 개발하고 현실화 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일자리정책을 넘어선 청년정책의 해법마련 등을 청년정책 발전 전략으로 내세웠다.

내포=최신웅 기자

134 X 64 mm